

데스크칼럼

김인수

사회부장



광주·전남 산업 구조를 둘러싼 위기론은 이제 일시적 침체를 넘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취약한 산업 구조, 반복되는 일자리 미스매칭, 외국인 노동력 의존 확대, 그리고 청년 인구 유출이 맞물리며 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복합적인 실태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산업 정책을 넘어 교육과 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이는 '광역 교육-산업 통합 모델'로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지점은 산업 구조의 한계와 그에 따른 교육의 괴리다. 광주와 전남은 자동차, 석유화학, 농수산업 등 전통 산업을 축으로 성장해 왔으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혁신 속에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더딘 이유는 지역 내 전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교육 체계가 행정 구역별로 분절돼 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과 기업 본사는 수도권에, 생산 공정만 지역에 남는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산업 현장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교육 통합'이 전제

광주·전남 통합의 길, 이대로 좋은가

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역시 교육의 질과 구조에서 비롯된다. 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청년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미스매칭'은 단순히 일자리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교육이 제공하는 커리큘럼과 실제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역량 사이의 간극, 그리고 제한된 경력 발전 가능성이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내몰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한 임금 차이를 넘어, 지역 내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백을 외국인 노동력이 빠르게 메우고 있는 현실도 우려스럽다.

제조업과 농업 현장의 외국인 의존도 심화는 단기적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기업의 기술 투자와 교육 훈련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지역 산업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

결국 핵심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교육-산업 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광역 교육-인재 양성 체계'의 재편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선, 교육 체계의 완전한 통합을 통해 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처럼 도시와 농어촌, 광주와 전남이 교육 정책을 따로 운영하는 것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도시권은 AI와 기술 실증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 인프라를 받고, 농어촌 지역은 신재생에너지와 미래 농생명 등 특화 산업과 연계된 직업 교육 및 연구 기반을 담당하는 '광역 단위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대학, 직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산업 현장과 연계되는 일관된 인재 양성 시스템이 마련될 때, 청년들은 지역 내에서도 충분한 경력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학 간 벽을 허물고 공동 학위나 교차 수업을 활성화해, 광주·전남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캠퍼스로 만드는 통 큰 전략이 필요하다.

일자리 정책 또한 이 교육 통합의 연장선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광역 단위에서 산업별 직무 체계와 임금 기준을 통합 관리하고, 광역 교통망과 공공 주거 정책을 결합한다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더 넓은 기회의 공간을 누릴 수 있다. 교육이 산업을 견인하고, 산업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야말로 외국인 노동력 의존에서 벗어나 생산성 중심의 산업 전환을 이룰 유일한 길이다.

광주·전남 통합의 본질은 행정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산업과 교육, 인재 정책을 한 그릇에 담아 재설계하는 '전략적 결합'에 있다. 행정과 산업, 교육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포괄적 통합을 통해 인재가 흐르고 산업이 숨 쉬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 설계가 얼마나 치밀하고 과감하느냐에 따라 광주·전남의 100년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기고

박성우

드러림 대표



전역은 흔들림을 지나 다시 삶을 세우는 시간

의 자리를 직접 찾아야 한다. 준비했던 진로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거나 치열한 경쟁에서 맞닥뜨린 실패는 자신감을 적지 않게 흔들어 놓는다.

심리적 압박이 오래 지속되면 신체적 증상으로 번지기도 하면서 스스로 약해졌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능력 부족이나 실수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누구나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조정기이며, 전역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 시간을 안정적으로 넘여가기 위해서는 시선을 '끝'이 아닌 '이여짐'에 두는 태도가 필요하다. 군 생활을 통해 다져온 책임감과 추진력, 위기 대응 능력은 사회에서 역시 강력한 자산으로 작동한다. 중요한 것은 이 자산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삶의 다음 페이지에 이어낼지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일이다.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경험의 방향성을 점검하며, 필요한 공부와 작은 실행을 차근차근 이어간다면 흔들리던 감정은 서서히 정돈되고 새로운 중심을 찾게 된다.

전역의 공백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대군인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이다.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전담 상담과 진로·취·창업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불안한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 상담을 통해 단기 목표부터 다시 세우기 시작하면 무

너졌던 일상의 리듬이 조금씩 되살아난다. 본인도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실제 경험이 제대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하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제대군인이 공유하는 경험이며 성장통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 마음의 짐은 훨씬 가벼워진다.

전역 직후 느껴지는 감정은 뭉툭한 고통과 허탈을 떠올리게 한다. 처음에는 불안과 공허함이 압도적이지만, 그 속에는 이미 충분히 성숙한 힘이 잠재돼 있다.

시간이 흐르고 준비가 쌓이면 뭉툭했던 감이 어느새 달콤한 향기로 익어간다. 흔들렸던 마음도 제자리를 찾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자체를 두려움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이 흔들림은 다시 서기 위한 성장의 과정이며, 더 단단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목이다.

전역은 끝이 아니다. 전역은 이어지며, 확장이며, 새 문장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시작이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발짝씩 내딛을 때 우리는 어느새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진 모습으로 삶의 주인공이 돼 있을 것이다. 제대군인들의 새로운 'And'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독자투고

상가 앞 주차 방해물, 불화만 키운다

주객이나 상가 앞 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일부 업주와 주민들이 집 앞 도로변에 주차방해물을 설치하면서 이에 따른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집과 상점 앞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페타이어와 화분 등 불법 적치물을 쌓아놓고 있다.

이런도로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권까지 침해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자정이 요구되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일부 영업 상가 앞과 이런도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 자신의 영업점을 방문한 손님이 아니면 아예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차량운전자와 실랑이까지 벌이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마구잡이로 온갖 주차 방해물들이 즐비하게 나뒹굴다보니 애만 차량운전자들은 노상 방해물을 피해 이리저리 곡예운전을 일삼게 되면서 사고위험이 증대됨은 물론 도심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둬야 할점은 단순히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해 두거나 그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나하나 쫄이' 저기도 세워놓는데 무슨 손님이 아니라 아예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차량운전자와 실랑이까지 벌이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김대형 정경철서삼서마을출소장

사설

중동발 여수산단 위기...지역경제 번져선 안돼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어려움에 경우·비료·석유화학 계열 국내 최대 규모의 중화학 공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생산 중단 위기에 빠졌다.

가동률을 줄이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일부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서둘러 조기 정비에 들어가고 있다.

연간 228만톤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 NCC는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망 붕괴로 가동률을 50%대로 하향한데 이어 최근 고객사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자연재해·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원료·물류·공급망이 통제 불가능해 계약 이행이 곤란할 때,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LG화학 여수공장도 오는 27일경 80만톤 생산 규모의 2공장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며 일부 기업들은 매년 3~5월 들어가는 대정비 기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문제는 가동이나 경기 불황에 따른 수요 둔화·공급 과잉 등으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데다 중동발 리스크까지 겹쳤다는 데 있다.

아니, 이 리스크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불확실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여기에 석유화학 산업의 과잉 설비·생산량 감축과 고부가·친환경 제품 전환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도 조만간 시행된다.

이럴 경우 지역 최대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여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여수상공회의소가 최근 내놓은 '2025년 3분기 여수지역 경제동향보고서'를 보면 여수산단 가동률은 88.4%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고 고용 인원과 생산액은 각각 4100명, 8.2%나 감소했다. 상반기 1.1%였던 지난해 실업률도 하반기 2.4%로 크게 뛰었다고 한다.

이같은 여수시의 상황은 정부가 지난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전남도도 여수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토록 정부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발 리스크와 산업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지역이 떠안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광주·전남 혼인 회복세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혼인 건수가 회복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한 동안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혼인 건수는 5983건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2019년 6297건이었던 혼인건수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5560건, 확산기인 2021년 4901건, 2022년 4902건까지 떨어졌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인 2023년 5169건, 2024년 5688건 매년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도 4.3건으로 전년보다 0.3건 상승했다.

전남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혼인건수가 7307건으로 2024년(7049건)보다 3.7% 증가했다고 한다.

2019년 7413건이었던 혼인건수도 코로나19기간 큰 폭으로 줄었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조혼인율도 4.1건으로 2020년 이후 6년 만에 4건대를 회복했다.

이같은 현상은 1991년생부터 1996년생, 즉 '2차 에코붐 세대'가 30대 초·중반에 진입하면서 혼인 수요가 늘어남에다 코로나19때 억눌렸던 결혼이 뒤늦게 집중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다 고용시장 불안으로 청년 순유출 또한 심화되면서 혼인 건수 증가가 바로 출산율 상승으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평균 초혼 연령은 광주는 남성 33.9세, 여성 31.7세로 전년보다 각각 0.1세, 0.2세, 전남은 남성 33.7세, 여성 31.0세로 모두 0.2세 상승한 상황이다.

광주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도에 비해 7.8%증가한 6500명이지만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0.76으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전남은 출생아 수가 8700명으로 전년에 비해 6.1%증가했으며 합계 출산율 1.10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마저도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뜻하는 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못미친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경제·육아 부담에 결혼을 미루거나 '혼인 후 아이를 안 낳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출산 장려·정책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취재수첩

공공기관 2차 이전 선제 대응을

이현규

정치부 부장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통합을 먼저 추진한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에서 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남·광주 입장에서선 조건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 약속이 곧바로 이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결정 과정에서는 지역 여건과 수용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된다.

기관을 설득하려면 생활 여건부터 확인시켜야 한다. 직원들이 내려와서 거주할 수 있는지, 자녀 교육에 가능한지, 병원과 교통은 불편하지 않은지 등을 따진다. 이런 부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전 논의가 길어지거나 중간에 멈출 수 있다.

지금 시기는 더 중요하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 입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 준비는 따로 늦출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전 대상과 방식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

전남과 광주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점은 분명한 강점이다.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같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공기관 이전은 준비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이전이 이어지려면 기관별 상황에 맞춰 계속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보완해야 한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지금, 그 과정이 끊기지 않도록 꾸준히 이어가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까워졌다. 행정구역 을 하나로 묶는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실제로 지역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관심사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미 지역 간 경쟁이 붙은 사안이다. 수도권에 있는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각 지역은 유치 근거를 만들고 여건을 정비하면서 이전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남과 광주는 현재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유치 전략도 공동으로 짜고, 대상 기관도 함께 정해 대응하고 있다. 농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40개 기관이 대상이다. 이 기관들이 실제로 내려오면 일자리와 연관 산업이 함께 움직인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